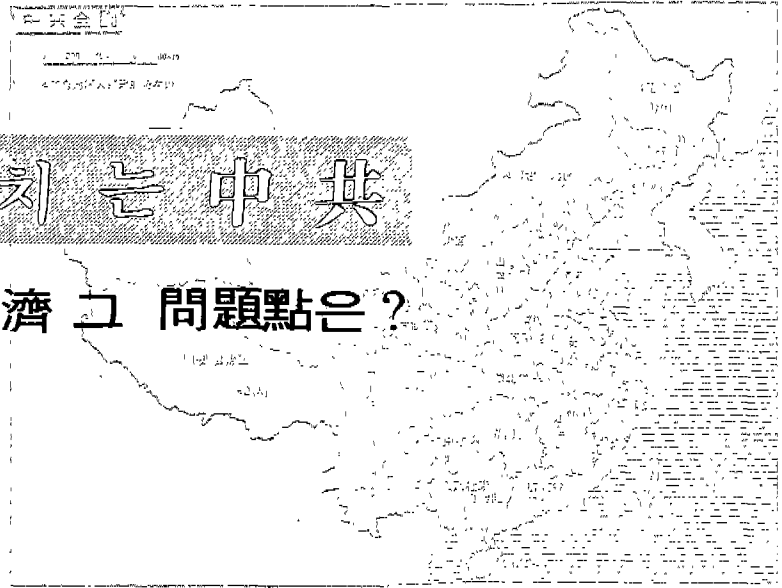


몸부림치는 中共

오늘의 經濟 그 問題點은 ?



「門戶開放政策」을 中止하는 날

「경제특구」와 병행하여 「문화개방정책」의 또하나의 측면은 수입의 「자유화」이다. 원래 생산능력이 낮은 만성적인 물자부족에 허덕이는 중공으로서는 해외로부터의 제품수입을 「자유화」하면 순식간에 대량의 소비재, 가전제품, 고급섬유제품, 화장품, 시계, 카메라등의 정밀기계제품, 자동차류가 유입되어 국내시장에 흡수된다는 프로세스를 밟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의 공업제품에 비해 품질, 성능, 디자인면에서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국산품은 이러한 고급내구소비재 뿐만 아니라, 수입의 「자유화」가 진행됨으로써 국내시장에서 극히 어려운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이 경쟁에서 패배한 국영기업은 부득이 합리화, 減量경영으로 전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적자를 감수 하든가 하는 그 어느 쪽인가를 택해야만 한다. 적자누적이 계속되면 국유기업이라 할지라도 파산케 해야한다는 정책이 취해진다면 철저한 경영의 합리화 또는 減量경영이 불가피하게 된다.

「문화개방정책」의 최대의 목적은 국내기업의 합리화, 감량경영에의 결단을 촉진하는데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오래동안 「鐵腕主義」에 젖어온 중공의 국유기업이나 지방기업으로서는 수입의 자

유화는 엄한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수입의 자유화」는 중공으로 부터 외화의 유출을 의미하게 된다. 즉 외국제품의 대량 수입은 그 지불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수출은 품질, 성능, 디자인 면에서 뒤떨어진 중공제품이 수출시장에서의 지위가 저하되면서 감소된다.

이때까지 중공은 외국무역에 있어서 수출한 양만큼 수입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만약 수출이 늘지 않으면 국내 수요의 증가에 관계없이 그 양만큼 수입을 삭감한다는 정책이다.

또 수입은 어디까지나 경제건설에 절대 필요한 플랜트, 기계류에 한정되며 국내의 소비시장에 돌릴 소비재의 수입은 극력 억제한다고 하는 것도 외국무역정책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수입의 자유화」는 이러한 원칙의 포기를 뜻한다.

1984년, 중공은 대외무역에서 9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것은 전년의 出超액 30억달러에서 본다면 무역수지의 큰 악화인데, 85년에 들어서 상반기 만으로도 이미 入超는 31억달러에 달하며 연간을 통하여 60억달러의 入超와 무역수지의 악화는 84년에 비해 다시 必至의 정세에 있다. 이것도 「수입자유화」정책이 초래한 결과이다.

이러한 마이너스면을 보충하거나 또 이러한 마이

너스면에 대응하기 위해 중공수뇌부는 「수입자유화 정책을 85년 3월경부터 급속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자세를 전환해 가고 있다. 앞에서 말한 「滯船」 현상이 심각화함에 따라서 모처럼 수입을 제약한 외국제품이 중공의 항만에 도착하면서도 양륙이나 국내반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도 이러한 「수입자유화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실문제로서 85년 4월이후 내구소비재의 수입은 급속으로 억제되어 가고 있다. 또 85년에 큰 문제가 된 海南島에서의 해남도사건(수입자유화를 기화로 해남도의 행정책임자가 2만대에 달하는 승용차를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막대한 프리미엄을 붙여 국내에 전매한 사건)의 표면화도 내구소비재 수입을 억제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문화개방정책」은 현재의 중공경제의 실정으로부터 명백히 안정된 노선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것 또한 하나의 테스트케이스로서 「수입자유화」를 지속적으로 경제정책의 근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중공수뇌부에는 없을 것이다.

國際收支의 管理能力이 弱한 背景

1983년부터 본격화한 「문화개방정책」과 함께 이번에는 텔레비전, 냉장고, VTR, 라디오카세트, 시계, 카메라, 승용차등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공으로 향한 수출이 급증하고 「中共붐」이 일어났다. 그러나 제 2차 중공붐도 85년 3월 이후 급속으로 냉각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중공측의 외화부족에 있다. 한때 160억달러에 달했던 중공의 외화준비는 현재, 그약 절반인 80억달러 전후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것은 「문화개방정책」과 관련된 「수입자유화」로 대량의 소비재를 계속 수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 당시와는 달리 요즘 중공은 「수입자유화」정책을 공식으로 포기한 일은 없다. 단지 商談의 진행, 혹은 선적시기의 設定에 있어서 「滯船」을 이유로 연기하거나 상담을 중단하는 일들은 있다.

그만큼 문제는 폭발적으로 표면화된 것이 아니라 무적인 단계에서 잠행한 상태에 있다.

이점은 1980년의 「經濟調整」과는 대조적인 차이이다. 또 중공은 既契約分에 대해서는 외화부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행한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국제금융시장에서 대량의 외화를 도입할 방침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때까지 중공은 일체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받아 들이지 않고 어디까지나 「자력갱생」을 원칙으로 하는 정책을 취해 왔으나 요즘에는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외화부족을 차관에 의해 보강하려는 방침으로 전환하고 있다.

中共市場은 期待할 수 있는가

I. 「自由化」政策의 限界

「一黨獨裁」体制은 決斷코 拋棄하지 않는다.

鄧小平에 의해 인솔되고 있는 현재의 중공지도부는 중공이 현재 처해있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自由化政策」을 더욱 진행시켜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 「香港의 주권반환」을 성공리에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중공자체가 세계에서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개화된 나라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동시에 「정보의 공개」 혹은 「정보입수의 자유」를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과는 표리의 관계에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공산당에 의한 일당독재체제라는 정치체제와는 모순되는 일이다.

현재, 중공에서 최대의 발행부수를 갖는 「消息通訊」이라는 출판물이 있다. 이것은 중공의 일반대중에 공개할 수 없는 해외정보를 게재하는 일간지로서 중공공산당의 중견이상의 간부들만이 읽을 수 있는 간행물이다. 「消息通訊」에는 세계각국의 주요 신문 기사, 혹은 논평이 게재되고 있다. 중공공산당의 중견이상의 간부들이 이외로 국제정세에 밝은 것도 이 일간지를 읽고 있는 덕분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원이라 해도 최하급의 당원에게는 읽을 수 없는 신문이다. 더욱이나 일반대중에게는 전연 접

촉할 수 없는 그룹위의 존재에 불과하다.

공개되고 있는 매스컴. 예로 「인민일보」등 일련의 신문은 「消息通訊」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한 정된 정보만을 개재하는 것이 중공의 통례이다.

이러한 「정보공개」의 제한 또한 「정보입수의 자유」의 부정은 중공이 현재의 공산당에 의한 一黨獨裁體制를 끝까지 견지하려는 자세와 일치하고 있다 그것은 동시에 21세기를 향해 급속으로 전개되는 선진제국과의 「정보화사회」의 성립에 스스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다음에 소개하는 「새장속의 자유」라고 말한 陳雲의 표현은 「경제의 자유화」정책에도 명확히 일정한 制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을뿐 아니라 「정보의 공개」 혹은 「정보입수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할 생각이 중공의 지도부에는 전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의 부정은 공산당의 일당독재체제와 표리의 관계이다. 이점은 중공을 이해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사실로 되어 있다.

중공은 어디까지나 공산권에 속하는 나라이다. 공산당의 일당독재체제는 여하한 사정하에 있어서도 끝까지 이를 견지해야만하는 중공지도층의 공통된 신조로 되어 있다.

「경제의 자유화」정책과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문화개방」정책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외국인에 개방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만약 외국인에 「정보공개」를 전면적으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공산당의 일당독재체제의 기반인 「정보독점체제」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되어 중공은 공산권에서 이탈해야 하며 공산당은 일당독재체제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된다.

鄧小平그룹을 포함하여 중공공산당의 지도부는 어디까지나 중국공산당에 의한 중국의 지배체제를 끝까지 지킬 결의를 가질뿐만 아니라 만약 일당독재체제에 저촉하는 일, 혹은 그 기반을 위태롭게하는 움직임이 국내에서 발생한다면 그것은 무력의 행사를 불문하고 철저한 탄압의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결의에는 변함이 없다.

「香港반환」문제에 있어서도 홍콩의 주민이 희망하는 「港人治港」의 원칙에 중공은 반대하고 있다. 현재도 홍콩의 주민은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나 정치에 관한한 영국정부가 사실상의 독재권을 장악하고 있다. 홍콩의 주권 반환후에도 영국정부를 대신하여 중공정부가 정치의 전권을 독점하는 체제로 이행하는 「一國二制度」의 원칙은 홍콩에 관한한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一國二制度」의 원칙은 정치의 자유를 광범하게 허용하게 되는 곳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자유중국(台灣)에 있어서도 국민당이 사실상의 일당독재체제를 하고 있으며 本島人(台灣출생)들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정권은 그들의 독립운동을 엄하게 탄압하고 있다. 이것은 자유중국의 국민당이 만약 중공을 지배한다고 해도 그 독재 체제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중공은 미국, 유럽의 여러 나라 등에서 형수하고 있는 정치의 자유를 중공국민들에게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일당독재체제의 원칙을 포기할 생각도 갖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중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또는 어느 체제를 택할 것인지는 중공인 자신들의 문제이다. 단지 말할 수 있는 것은 향후 21세기에 걸쳐 「세계의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정보화사회」에 중공은 스스로 참여하는 문을 계속 굳게 닫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체제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느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는 그들 국민들의 책임이며 다른 외국인이 강요할 문제도 아니다. 또한 그들 나라의 內政에 우리가 간섭할 성질의 것도 아니며 그러한 필요도 없다. 단지 각자의 체제가 갖는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상대국에 대한 외교자세를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공에 대해서 공산권에 속하는 한 나라라는 원칙을 잊고 중공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게 될 뿐이다.

「自由化」와 共産黨權力鬭爭의 깊은 關係

「자유화」정책에 있어서도 이것은 극히 좁은 한계속에서의 의미로서 그 한계는 정치정세, 특히 권력투쟁의 결과 여하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표현을 달리하면 중국공산당 내부에서의 좌우파의 투쟁은 이때까지도 격렬했으며 앞

으로도 계속될 뿐만 아니라 우파가 우위에 서게 되면 「자유화」정책의 한계는 다소 넓어질 것이나 좌파가 반격하면 그 한계에 따라 한계가 좁아진다. 즉 「자유화정책」의 한계는 10년, 20년이나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점도 중공을 이해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전제조건이 된다.

현재는 1981년에 제정된바 있었던 「스트라이크權」 혹은 벽신문 「人字報」등,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가 부정되고 말았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으로서 언론자유에 부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자유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일견 모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공 수뇌부의 생각은 다르다.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고 스트라이크權을 승인하는 가운데서는 빈부의 격차를 확대하고 사회불안을 조장할 염려가 있는 「경제의 자유화」 정책을 취할 수는 없다. 역으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발언의 자유를 부정하는 현행체제 하에서는 비로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일정 범위에서 인정하는 정책을 취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공의 현재의 체제는 언론의 발표, 비판의 자유가 없는데 그것이 중공의 知的호기심을 자극하기는 커녕 역으로 억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공에서는 전통적으로 지식인은 정치에 종속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점은 아마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화정책」에 대한 제한도 중공이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는한 앞으로도 존속할뿐 아니라 국내의 정치정세에 따라서는 오늘날의 「자유화」의 한계가 더욱 좁아지거나 압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II. 「새장속의 自由」理論

「萬元戶」와 가난한 農民層의 對立

공산당의 일당독재체제는 법치주의의 부정이다. 선진국에서는 법률에 의한 지배체제가 확립되고 있다. 헌법의 규정에 따라 「어떠한 사람이라 해도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 없이는 체포, 구금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중공에서는 이러한 법의 절대

지배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을 대신하여 지배하는 것은 그때 그때의 지도자의 생각에 달려 있다. 이것을 「人治주의」라고 부르며 법률에 의한 지배체제를 가르키는 「法治주의」와 對比된다.

법률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지도자의 생각에 따라 그때그때 정책이 임의로 변경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에 정치적 자유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또 선거에 의한 정권의 교체, 즉 평화적 수단으로 인한 정권교체가 가능한 선진국과 공산당이라는 하나의 정당이 정치권력의 모든 것을 독점하는 일당독재체제와의 차이인 것이다.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가 있어야 하며 이 자유가 가급적 넓은 범위에 걸쳐 국민에게 허용되는 나라에 한정된다. 발전적인 「경제의 흐름은 「정보화사회」에 있을 수 있으며 「정보사회」를 실현한 나라가 아니면 기술개발이나 경제성장의 속도는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상식화된 이론이다.

그 전제가 되는 「정보입수의 자유」로 직결되는 언론의 자유, 비판의 자유없이는 경제성장과 기술수준의 향상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면 21세기가 되어도 중공은 여전히 발전도상국과 다름없는 상태에 있을 것이다.

「농업의 자유화」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萬元戶」가 증가하고 농촌에서의 빈부의 격차가 확대하는 가운데 「농업의 자유화」가 어느 정도까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생긴다.

인구의 8할을 차지하는 농촌의 「빈부의 격차」가 급속으로 확대하면 얼마되지 않는 「萬元戶」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빈곤한 농민이 매립한다는 양상은 중공의 여러곳에 발생할 것은 뻔한 일이다. 문제는 이 「萬元戶」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농민이 어떠한 그룹에 속하느냐에 달려있다. 「인민공사」가 전면적으로 해체되고 「농업의 자유화」가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한 일손을 많이 갖고 있는 농가가 보다 생산성이 높은 비옥한 농지를 독점하려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사실이다.

농지 그체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용권이 인정된 농가는 사실상 그 사용권을 매매하려고 한다.

*